

I .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2010. 12. 29.

충남지역 갈등현안과 해법찾기(Ⅰ)

- 갈등 현장 지원 체계 구축 사업 관련 갈등 현안 현장 조사 -

최한규 박사(선문대 정부관계연구소 연구위원)
전오진 박사(호서대 사회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목 차

1.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2. 금강하구둑 기수역복원 관련
3.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관련
4.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조성관련
5.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6. 천안직산읍 국도1호선교차로 설치
7.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관련
8. 천안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9. 서산국방과학연구소 중설관련

1.1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개요

- KTX 역명칭갈등후(아산시행정구역) 2003년 천안택시업계 공동영업 요구
- 아산택시업계 : 천안아산 전체 통합, 천안 – 부분통합 주장
- 충남도의 조정노력에도 갈등 지속, 2010년 11월 건교부의 직권 조정 절차 중
→ 정부간갈등(기초간 갈등), 관할구역조정 갈등, 갈등 해빙기

■ 진행경과

- 2003.12. 2 천안택시업계 공동영업/택시승강장설치요구(충남도)
- 2004.4. 2 천안과 아산택시업계 불리적 충돌(KTX 천안아산역)
- 2004. 4. 6 조정회의(충남도)
- 2009. 7. 20 충남-천안-아산 실무자 간담회(아산시관할구역)
- 2010. 11. 1 국토부-천안-아산 관계자 간담회(공동사업구역/현행유지)

3

1.2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정부간 갈등(기초-기초), 관할구역 갈등
- (쟁점) KTX 행정구역 VS 일부포함, 이용객편의, 부분통합/전체통합,
- (이해당사자) 아산시(택시업계)-천안시(택시업계)-충남도-국토부
→ 도시자 조정권/ 국토부장관 조정권 => 제3자에 의한 관할 갈등 타결임박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양측 주장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시 청취, 객관적 자료분석 → 대화와 토론
- 충남도의 조정안 발전된 형태로 조정될 가능성 높음(부분통합→전체통합)
- 일방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협의
→ 대화와 토론 → 조정안에 대한 순응

4

1. 3.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해결 방안

- 통합추진위원회, 조정위원회 협력능력 미숙
 - 양방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조정안 제시
 - 조정이후에 상생협력방안 마련
- ➡ (조정안) KTX역 통합, 천안일부지역 아산영업가능, 중기적으로 전체통합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아산과 천안의 상생협력 방안 마련 – 공동사업 구상
- 양지방정부의 사업자 설득과 이해

5

1. 4. KTX 천안·아산역 택시사업 구역

■ 관련 사진



6

2. 1.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개요

- 1990년 금강하구둑 설치 - 농공업용수 확보, 홍수예방 1841m
- 2009년 서천군 '금강살리기종합계획' - 기수역 복원 공식화(200m 철거)
- 군산시 농공업용수 확보관련, 홍수때 바닷물유입, 저지대 범람 등 반대
→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4대강 사업 미포함(갈등 잠재)

■ 진행경과

- 2009. 1.30 충남발전연구원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방안 제시
- 2009. 2. 4. 서천군 금강하구 기수역 복원 공식화
- 2009. 3. 13 군산시 반대 입장 기자회견
- 2009. 3. 25 금강하구호 관련 간담회(국토부-서천군-군산시-충남-전북)
- 2009. 6. 8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국토부) 금강하구둑 수질개선 미포함
- 2010. 10. 2 금강하구둑 개선사업 채택(충남도) → 2010.11.16 용역(국토부)

7

2. 2.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정부간 갈등(기초-기초/광역-광역), 지역개발갈등, 환경분쟁
- (쟁점) 농공용수/담수사용불가, 수질개선/효용의문, 홍수예방-의문, 환경개선
- (이해관계자) 서천군-군산시-충남도-전북도-국토부-농림부
→ 갈등쟁점 : 해수유통의 효과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해수유통(기수역복원) 효과성에 대한 쟁점 → 전문가 영역
- 양 지방정부간의 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
- 해수유통시 대안 탐색 작업
→ 기관간의 협의를 통한 해결 및 전문가 포함의 협의체 구성

8

2. 3.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갈등 이해당자의 협의기구 : 전문가 그룹 참여
 - 기수역복원 효과에 대한 분석
 - 농공업용수 확보 대안 탐색
- 기관간 협의체 구성으로 합리적 대안 제시 가능(전문가영역)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이해당자의 협의기구 구성
- 전문가를 통한 대안 탐색.

9

2. 4. 금강하구둑 기수역 복원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0

3. 1.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개요

- 공주시 이인면 신영리 일원 공주역 설치 2009년 착공, 2014년 완공 목표
- 전체 1,520m 중 220m 제외 토공구조물 건설 – 주민들이 반발
- 18m의 토공구조물로 마을 단절 및 조망권 차단 → 교량형 건설 주장
- ➡ 주민-시공사 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갈등 중폭기(일부협의)

■ 진행경과

- 2006. 4. 28 남공주역 신설(SOC 건설 추진 위원회)
- 2007. 6. 17 공주시 이인면 신영2리 일원 설치 확정
- 2009. 7. 8 주민설명회 : 지역주민 교량화 요구
- 2010. 9. 25 간담회(충남지사-철도시설공단-주민) 교량 400, 도로 확장
- 2010. 9. 30 지역주민 300여명 시위

11

3. 2.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정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 (쟁점) 성토공사 V 교량화, 소하천이설 VS 휴식공간, 도로 확장, 역세권 개발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시설공단-건교부(기재부)-공주시-충남도
- ➡ 협의체 구성 후 협의중이며 교량화 부분만 미합의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행정절차의 투명성 확보로 주민 신뢰 회복
- 민관협력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의
- 대화와 설득 필요
- ➡ 협의체 구성하여 대화와 설득 지속하고 투명한 절차로 주민 신뢰 회복

12

3. 3.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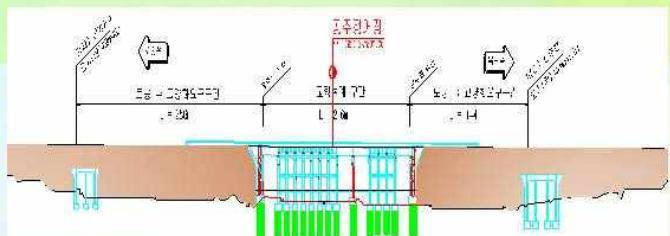
■ 해결 방안

- 철도노반 교량화 요구가 1차 쟁점이며 휴식공간확보, 진입로확장 부수쟁점
 - 지역이해관계자 포함하는 협의체구성 및 운영내실화
 - 지역주민의 이해와 설득 및 간접적인 유인책 마련
- 대화와 토론으로 주민 이해와 설득

13

3. 4. 호남고속철 공주역사 설치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4

4.1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개요

- 충남도·예산군 경인주를공단 조합 MOU체결 23개기업 상동리일원 공단설립
- 민간개발 방식 481천m² 667억, 2013년 완공
- 지역주민 – 주를공장으로 분진, 악취로 낙농업피해, 주민건강 위해 공단
→ 산업단지의 인식차이: 주민과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해당, 갈등증폭기

■ 진행경과

- 2009. 11. 23. 경인주를공단조합 + 충남도 + 예산군 MOU 체결
- 2010. 7. 28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2010. 8. 12. 주민설명회 무산(예산 고덕주민, 당진군 면천주민 반대)
- 2010. 9. 1 반대대책위 충남도 항의방문, 9. 30. 예산군청앞 시위
- 2010. 11. 3. 당진군 의회 조성 반대 결의문 채택.

15

4.2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정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환경관련갈등
- (쟁점) 신소재VS주를, 친환경시설설치VS환경오염, 경제활성VS 피해유발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찬반)-예산군-산업단지(주)-당진군(회)-충남도
→ 기피시설입주와 관련한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인지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기피시설입지와 관련 갈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실득 필요
- 주민의 행정기관, 상호 불신 만연 → 주민 공동체 봉고 회복
- 주민과 협의체구성 – 주민참여방안 마련(공해감시단운영, 협약체결)
→ 주민과 협의체구성, 상호협약체결 → 불신 완화

16

4.3.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이해당사자간 협의체구성, 대화통로 개설
- 이해당사자간 협약체결 : 환경감시 모니터링단 구성
- 주민생활지원방안 및 주역공동체 회복 방안 마련
- ➡ 협의체 구성으로 상호불신을 완화하고 협력 체결로 해결 노력

■ 비고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협의체 구성 지원
- 협약 체결 및 이행: 공해모니터링단, 협약 체결

17

4.4. 예산·신소재산업단지 조성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18

5.1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개요

- 아산신도시 2단계 533.7만평 중 1차에 대한 보상은 현재 진행중이며,
- 2차 탕정지구 377.3만평에 대해 LH공사와 국토부가 전면 재검토
- 지역주민들이 16년간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원안추진 요구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갈등 증폭

■ 진행경과

- 2005. 12.29 탕정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건교부)
- 2009. 12. 1 아산신도시 2단계 1, 2차 지구 분리, 1차지구 실시계획승인
- 2010. 9. 10 아산탕정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전면재검토(건교부)
- 2010. 9. 15 신도시대책위 현수막 게시 및 손해배상 소송 전개 등 결의
- 2010. 10. 11 아산시 건교부 건의 (약 146만평 개발 지속 등)

19

5.2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기관간 갈등, 지역개발 관련 갈등, 갈등 증폭기
- (쟁점) 원안추진 VS 사업취소, 지구해제 VS 사업연기, 피해보상
- (이해당사자) 주민-LH - 국토부- 아산시- 충남도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주민 재산권 침해, 충남발전계획수정 등 후속파급효과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주민의 대 행정기관 불신 만연 -> 민·민 갈등으로 지역공동체 붕괴 우려
- 적절한 대안 사업 추진 및 주민 안정화 노력
- 오랜 재산권 제한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협의체구성 → 간접적 보상 노력
→ 적절한 대안 사업 구성으로 주민 안정화와 피해 보상

20

5.3.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아산시의 의견 반영 되도록 노력
- 주민 피해 보상 대책(간접보상)을 위한 협의체 구성
- 관련 사업 지속 추진 노력(아산시, 충남도의 사업 참여)
- 주민 피해 최소화 노력과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민관 협력으로 협의체 구성 : 피해 보상 및 후속 사업 지속 협의
- 후속 사업에 영향 주지 않도록 도로 등 기반 시설 설치 노력

21

5.4. LH공사 택지개발사업 축소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22

6.1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개요

- 2005년 충남TP조성, 업체 100여개 입주, 직산사거리 상습정체, 불법유턴
 - 상습정체로 고통 받던 마을 주민과 충남 TP 직원들이 교차로 설치 탄원
 - 대전국토관리청은 예산문제와 신호등 설치 이격 550m 이내 라며 난색
- 주민과 기관간 갈등, 시설설치 관련 갈등, 갈등 해빙단계

■ 진행경과

- 2006. 4. 19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 2010. 8. 11 직상읍이장협의회 충남TP 진입로 교차로 설치 탄원서제출(국관)
- 2010. 8. 17 대전국토관리청 → 예산관리사무소 이첩 → 불가 입장전달
- 2010. 9. 30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23

6.2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기관간 갈등, 시설물 철치 갈등, 갈등 해빙기
 - [쟁점] 주민 교차 설치 와 법적으로 설치 불가 입장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 국토관리청+천안시+경찰서
- 이해기관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 가능한 사안.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인식 공유로 갈등해결 가능
 - 예산문제와 법적 검토에 의해서 해결할 사안.
- 당시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24

6.3.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해결 방안

- 성환순환도로 건설로 진입로 혼잡 해결 가능(갈등 해결)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기관 협의로 예산 확보

25

6.4. 천안 직산읍 국도1호선 교차로 설치 갈등

■ 관련 사진



26

7.1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개요

- 한국농어촌공사가 4대가 사업 일환으로 신대저수지 둑높이기사업 시행
 - 기존 둑 보다 3.5m 높이고 102억 투입 2015년까지 완공 목표
 - 주민들은 가뭄이나 홍수피해없고, 면소재지로 둑붕괴위험 등 피해 호소
- 주민과 기관의 갈등으로 지역개발 관련 갈등, 대화와 설득

■ 진행경과

- 2010. 1. 15. 한국농어촌공사 신대저수지 둑높이기 사업 예정지 제출
- 2010. 6. 29. 환경성 검토 협의회 의견 수렴
- 2010. 7. 8. 사전환경성 검토조사 제출 및 주민공람 시작
- 2010. 7. 26 주민설명회 – 주민 축조반대, 준설 및 퇴적토 제거 사용 요구
- 2010. 11. 둑높이기 사업 토목공사 입찰, 보상 협의

27

7.2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관련 갈등, 수자원개발, 갈등 해빙기
 - [쟁점] 농업용수확보 VS 충분, 생태환경개선, 주민불안, 주민피해보상
 - [이해관계자] 지역주민-농어촌공사-청양군
-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설득 후 공사 시작, 주민 설득 미흡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둑 아래 주민(면소재지)과 둑 위 주민간 온도차이 => 계획단계 주민참여
 - 주민설득 작업 후 사업 시행
 - 주민의 불안간 해소와 주민생활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협의
- 당시자간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28

7.3.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계획단계에서 주민참여 : 이해와 설득
- 주민생활지원과 대화와 협의의 장 마련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설득

■ 비고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29

7.4. 청양 신대저수지 축조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0

8.1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개요

- 천안시 풍세면 풍세산업단지 조성 2011년까지 완공 계획
- 한전이 산업단지에 전력공급하기 위해 3.63km 154kv 풍세분기 송전설치
- 송전선로 지나는 지역주민과 한전간 경과지와 설치 방법 놓고 갈등 대립
→ 주민과 기관간 갈등,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 갈등증폭기

■ 진행경과

- 2008. 6. 17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한전→지경부)
- 2008. 9. 29 주민설명회 개최, 풍세면 주민 경과지 변경, 전구간 지중화요구
- 2009. 9. 10 실무회의(천안시+한전) 과다 사업비부담, 타기관협의 등 거절
- 2009. 10. 8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요구 미반영 불만 주민 퇴장 무산.
- 2010. 9. 1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지경부) – 보상협의 중

31

8.2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비선호시설설치와 관련 갈등, 주민과 기관간 갈등, 주민간 이해갈등
- (쟁점) 선로변경VS 최적지, 지중화 VS 경제성, 재산가치하락 VS 마을지원사업
- [이해관계자] 주민-한전-천안시-지경부
→ 기피시설 설치와 관련한 갈등으로 주민의 이해와 설득(공익사업) 협의체구성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기피시설설치 와 관련한 갈등으로 협의체구성 해결
- 재산가치 하락 등 마을지원사업 등 간접적인 보상 협의 추진
→ 당시자금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 가능

32

8.3.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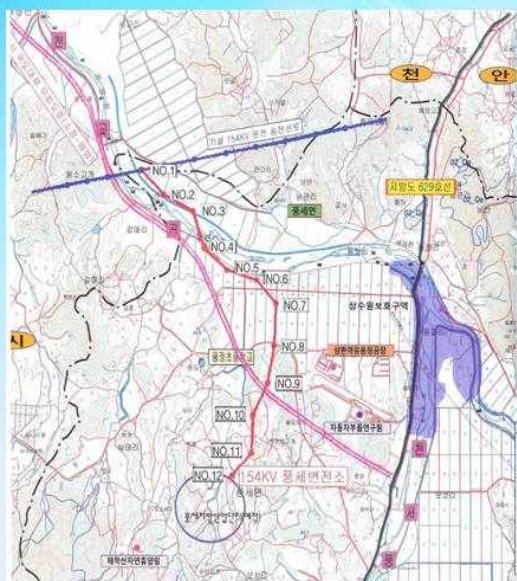
■ 해결 방안

- 주민과 이해 기관 간 협의체 구성: 이해와 설득, 모두 논의
 - 재산가치 하락 등 친환경 송전철탑 시공 권장 및 마을 숙원사업 지원 등 협의
- 기관과 주민간의 대화와 타협 방안 마련

33

8.4. 천안 풍세분기 송전선로 설치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4

9.1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

■ 개요

- 국방과학 연구소 2013년까지 기지1리 17만m² 연구소 증설 계획
 - 기지1리 42가구 중 약 30여가구만 수용하고 나머지 12가구 미수용
 - 비수용 주민들 나머지 가구수용해줄 것 요구하며 갈등 발생
- 주민과 중앙정부간 갈등(기관간), 지역개발관련 갈등, 이해갈등, 갈등증폭기

■ 진행경과

- 2010. 4. 7. 국방과학연구소 제5시험장 증설 관련 용역 발주
- 2010. 6 기지리 토지 측량 시작 (주민 인지)
- 2010. 7. 10 지역주민 토지측량 거부, 서산시청과 국방과학연구소 항의방문
- 2010. 8. 29 주민들 마을 전체수용 진정서 제출
- 2010. 10. 2 마을 전체 수용 협의회 개최, 국방과학연구소 수용불가 입장

35

9.2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

■ 성격[특성] · 쟁점 · 이해관계자 분석

- [성격] 주민과 중앙정부간(기관간) 갈등, 지역개발과 관련 갈등, 갈등잠재기
 - [쟁점] 주민피해감수 여부, 전체수용VS부분수용, 보상의필요성
 - [이해관계자] 비수용주민-국방과학연구소(국방부)-서산시
- 주민의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팽배, 주민이해와 설득 및 보상 협의.

■ 갈등 해법찾기 기본방향 설정

- 대화와 타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지방정부의 역할 중요, 갈등조정기구
 - 지방정부의 중재노력 절실히 요구됨.
- 지방정부의 갈등해결 중재 노력 요구(대화와 타협)

36

9.3.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

■ 해결 방안

- 지방정부(기초)의 갈등중재노력 : 협의체 구성 및 대화창구 개설
- 주민 피해 보상 (간접) 및 주민지원사업 등 논의

→ 지방정부의 갈등 중재 노력 (대화와 설득)

■ 비교 : 정책건의, 행정사항 등

- 기관 협의로 예산 확보

37

9.4. 서산 국방과학연구소 증설 관련 갈등

■ 관련 사진



38

갈등사례 갈등 수준

